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 후계체제의 3가지 의미를 중심으로 -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2011년 12월 19일 북한은 12시 특별방송을 통해 12월 17일 8시 30분 김정일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1974년 후계자 내정 이후 37년 동안 북한을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그리고 북한 핵문제에 깊이 관련된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일 사망 직전까지 북미 양자 대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극적 분위기 반전을 기대했고, 특히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6자회담의 재개를 기대했지만 김정일 사망은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북한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수령-당-국가체제와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 움직이는 북한의 수령체제는 1974년 이후 등장한 김정일의 후계과정을 통해 공고화되었고, 완성되었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혁명적 수령관과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후계자론은 김정일이 자신의 유일지도체제 확립 과정에서 수립되었으며,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이 북한체제에 큰 혼란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은 1974년 이후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약 20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충분히 혼란을 극복할 만큼 완성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포스트 김정일은 포스트 김일성과 비교할 때 국내외적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제 막 지도자에 길에 들어선 김정은이 3년에도 못 미치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후계 준비를 잘 마쳤는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순조롭게 권력 이양을 잘 마친다면 북한체제는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되겠지만, 후계체제의 미비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권력 이양에 실패한다면 북한 체제의 미래는 매우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 이른 판단이다. 후계자 김정은의 상징성과 지배 엘리트들의 단결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따

라서 당분간 북한의 엘리트들(지도자와 권력엘리트)은 이러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지만, 김정은의 권력 장악 시간이 지체되거나, 권력 엘리트 간의 자원 배분과정에서 지배적 세력이 등장한다면, 김정은은 권력 투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12년 이후 김정은 체제의 권력 안정성을 평가하는 예측적 시각을 갖춘 논문이다. 하지만 북한 체제에 대한 미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2009년 1월 이후 2010년 9월 28일 후계자로 공인,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까지 과연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계열 분석이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북한 후계체제를 분석하는 프레임(frame)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후계체제의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후계체제의 본질적 의미: 유일지도체제의 형성이며, 둘째, 후계체제의 구조적 의미: 수령체제의 유지 그리고 셋째, 후계체제의 정치적 의미: 수령과 후계자의 권력 갈등(역전)이다. 필자는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후계체제의 본질적 차원 : 유일지도체제의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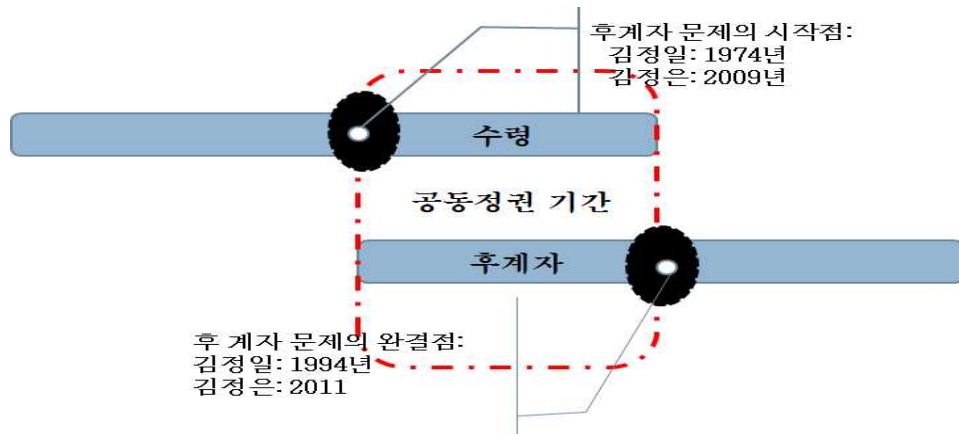
북한 후계체제의 본질은 “후계자의 선출뿐만 아니라 선출된 후계자가 자신의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¹⁾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를 선출하는 것은 후계구도의 첫 단계이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이 요구된다. ①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당내 ‘조직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② 조직공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간부(엘리트)들을 후계자에게 충실한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③ 후계자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혁명적 기풍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새로운 규율과 사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²⁾

후계자에게는 <그림 1>에서 보듯 두 시기가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수령이 살아 있는 동안, 수령의 보호아래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공동정권 기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에는 선임수령이 사망한 후, 본래의 의미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1)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1989), p. 78.

2) 이승열, <김정일의 선택>(서울: 시대정신, 2009), p. 224.

〈그림 1〉 후계체제의 본질적 의미



따라서 후계자 문제의 본질이란 첫 번째 시기 동안, 즉 수령과 후계자의 공동정권 기간 동안 후계자가 자신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가에 달려 있다. 공동정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정적인 권력이양이 될 것이고, 반면 짧다면, 후계자는 권력 장악에 필요한 시간을 갖지 못함에 따라 후계체제는 매우 불안정 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후계자로 선출되는 것보다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계를 만들고, 인민대중의 지지를 확립하는 과정이 더 어렵고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후계체제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김정은이 자신의 조직체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인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얻었느냐에 달려있다. 이 두 가지 중 후계체제의 안정성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후계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우선 김정일과의 비교를 통해 두 지도자가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김정일: 1974년, 김정은 2009년) 공식적으로 확정(김정일: 1980년, 김정은 2010년)될 때까지 어떻게 후계체제를 준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정통성은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부각시키는 ‘인물본위’ 였다. 즉, 수령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후계자로서 능력을 혁명 1세대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후계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인될 때까지 약 6년 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통해 후계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완수하는 ‘제도적 리더십’ 을 먼저 수립하였다. 이 기간 동안 김정일은 당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인사권, 보고권, 검열권을 확보하여, 당정군의 모든 기구들을 후계자의 지도체제 아래로 재편했다. 또한 엘리트 교체를 단행하여, 당시 김정일 말고 있던 3대혁명소조원들을 중심으

로 후계자 중심의 엘리트 구성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당 유일사상확립 10대 원칙을 통해 후계자 중심의 당 규율과 원칙을 확립하였다.

반면 김정은의 후계자로서 정통성은 ‘만경대, 백두산’에 기반을 둔 ‘혈통본위’였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2009년 1월부터 후계자로 공인된 2010년 9월까지 김정은에 대한 후계자 정통성 확립은 제도적 리더십 보다는 주로 ‘인격적 리더십’ 확립에 집중되었다.

첫째, ‘만경대 혈통과 백두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조작이 이루어 졌다. 2009년 9월 대만의 사진작가 후양 한밍씨가 강원도 원산에서 찍은 선전벽보 사진의 내용은 “장군복, 대장복 누리는 우리 민족의 영광”이라는 머리글 아래 “만경대 혈통, 백두의 혈통을 이은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를 ~ (중략) ~ 김일성민족의 앞길은 영원히 휘향 찬란하여라.!”라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생일을 후계자 내정 이후 2009년 6월부터 출생연도를 1년 당겨 1983년에서 1982년으로 고쳤다. 이는 김정일이 70세가 되는 2012년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며, 이때 김정은이 30세를 맞는 정주년이기 때문이다. 즉, 100세, 70세, 30세를 인위적으로 맞추춤으로서 후계자의 정통성을 만들려는 상징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조작은 과거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1980년대 초 김정일이 1942년 2월 16일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 개인 우상화를 통한 후계자 정통성을 시도하였다.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는 김정은이 김정일에게 “한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있고, 그의 선군사상과 이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선군영도의 계승자로서 정당성과 필연성을 갖고 있으며, 김정은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적 영지와 지략을 지닌 군사의 영재”라거나 “현대 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천재”라고 군사적 재능과 과학기술의 경력을 위주로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내부 교양자료에서도 김정은이 포사격뿐만 아니라 2009년 4월과 5월에 진행된 ‘축포야회(불꽃놀이 및 무도회)’를 준비하면서 컴퓨터 모의실험까지 지휘할 정도로 선진기술에 정통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셋째, 선군 이미지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군대에서 2009년 5~6월쯤 배포된 것으로 판단되는 대외비 문건인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 자료’에서 김정은이 이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군 간부 양성기관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주체의 영군술’을 비롯해 군사학을 공부했다는 사실과 함께 “2006년 12월 24일,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증서와 기장이 기여된 자리에서 주체의 선군 혁명 위업을 빛나게 이으실 것을 바라시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선군정치를 이끌어 갈 김정은의 탁월한 능력을 선전하기 위해 북한의 교양자료에서는 특히 그가 포병전에 능하며 북한군이 위성항법장치(GPS) 수신기와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지도를 활용하는 것도 김정은의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10년 초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벌인 포사격 훈련은 김정은이 직접 지

휘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또한 <조선중앙방송>이 2월 16일 방영한 북한군 포사격 장면은 김정일이 참관하였으며, 포사격이 김정일의 군사대학 졸업논문에 기초해 지휘한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김정일의 혈통본위에 기반을 둔 인격적 리더십은 2010년 9월 제 3차 당 대회 이후에는 ‘김일성 주석 따라 하기’로 훨씬 더 강화되었다. 3차 당 대표자 대회에 나타난 김정일의 모습은 김일성 주석의 젊은 시절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체중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그리고 입는 옷, 제스처 등 모든 부분에서 김일성을 그대로 모방하여, 인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정서를 자극할 뿐 아니라 김정일의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의 약점을 보충하려 하였다. 이러한 김일성 따라 하기는 김정일 사망 이후 더욱더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이 후계체제 수립 기간 동안 조직지도부를 통해 인사권, 검열권, 보고권을 틀어쥐고 자신의 조직체제를 먼저 수립했다면,金正일은 같은 기간 혈통승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위상화 작업을 벌였다. 따라서 “수령이 살아 있는 동안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북한 후계체제의 본질적 차원에서 보면, 김정일의 후계체제 확립은 단순히 후계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것 이상으로 보다 더 큰 본질적인 취약성, 즉 스스로의 조직체제(권력의 손과 발)를 갖추지 못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Ⅲ. 후계체제의 구조적 차원 : 수령체제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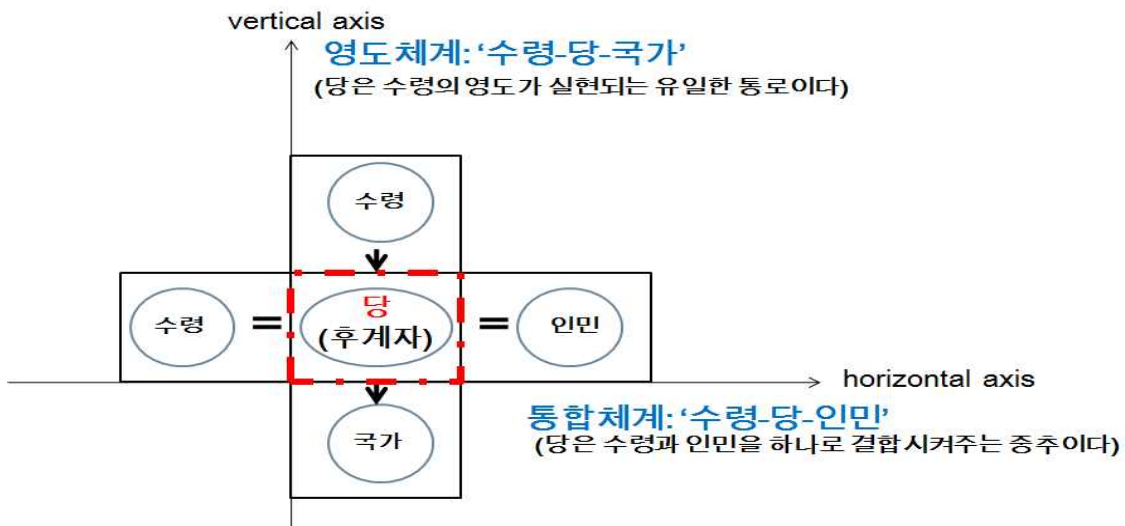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5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백 만명 이상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도 1998년에 김정일 정권이 출범했다. 김정일은 과연 어떻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1967년 이후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을 ‘수령체제’라고 명명하고 있다. 수령체제는 김정일의 후계체제 과정을 통해 공고하게 확립되어왔다. 스즈키 마사유키(鐸木昌之)는 북한의 수령체제를 “수령의 영도를 대를 이어 계속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³⁾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수령체제가 이미 후계체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수령체제는 아래 <그림 2>에서 보듯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영도체계이다. 이것은 수령-당-국가체제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억압체제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통합체계로서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로서 수령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의미한다.

3) 鐸木昌之, 『北朝鮮: 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유영구 역), 『김정일과 수령제사회주의』(서울: 중앙일보사, 1994), p. 20,

결과적으로 통합체계는 억압체계보다 북한의 경제적 위기극복에 더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이 지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극심한 위기에서 체제가 붕괴되지 않았던 이유는 수령-당-인민대중의 통합체계가 김일성의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2〉 후계체제의 구조적 의미



그렇다면 통합체계는 무엇인가? 북한 주민들은 두 개의 생명이 있다고 믿고 있다. 첫째는 자연적 생명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주민들은 자연적 생명을 부모에게서 받는 반면, 사회정치적 생명을 수령에게서 받는다. 또한 전자는 유한하지만, 후자는 영원한 것으로 인식한다. 결국 사회정치적 생명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수령과의 조직적 사상적 일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또한 수령과의 일치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그것은 수령과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 주는 당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바로 후계자인 것이다. 이것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이론적 실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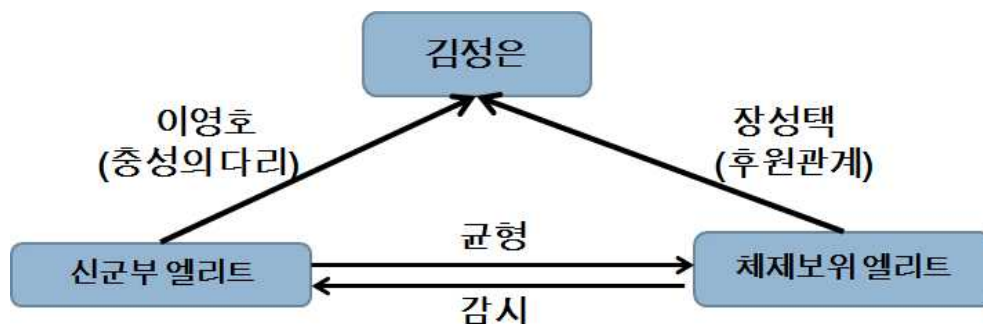
따라서 북한의 수령체제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직이 바로 당이다. 그것은 혁명건설에서 당의 역할과 관계가 있다. 영도체계 내에서 당의 역할은 “수령의 지도를 실현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또한 통합체계 내에서는 “수령과 인민대중을 하나로 결합시켜주는 중추”의 기능을 한다. 그런 이유에서 김정일은 “후계자를 당의 영도자로 선출한다”는 원칙을 정립하였던 것이다.⁴⁾

4) 김재천, 〈후계자 문제의 이론과 실천〉, p. 50.

그러나 2010년 9월 제 3차 당 대표자대회 이후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시기까지 북한은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위해 당의 지위와 역할을 군의 지위와 역할로 대체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과연 군이 당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지난 3차 당 대표자 대회를 통해 그동안 침체되었던 당의 기능을 회복하여, 당 중앙위원은 66명에서 124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으며, 정치국 인원도 기존의 10명에서 37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당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김정은 후계체제의 기반은 당 보다는 선군(先軍)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선군정치의 계승자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심의 후계자 영도체제를 만들었다.

김정일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대회에서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또한 하루 전에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대장’에 임명함으로써 김정은의 선군리더십 확립을 통해 후계체제를 공식화 하였다. 무엇보다 김정은의 조직공간인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파워엘리트의 숫자가 양과 질적 측면에서 북한의 최고 권력 기구인 국방위원회를 능가하였다. 이영호 총참모장을 비롯하여 군내 모든 수뇌들과 장성택 행정부장을 비롯하여 북한체제 보위엘리트들이 총집결하였다. 국방위원회 내 하드파워 엘리트 수는 총 6명(장성택, 김영춘, 오극렬, 주상성, 우동측, 김정각)이지만, 당중앙군사위원회 내 하드파워 엘리트의 수는 총 15명(이영호, 장성택, 김영춘, 김정각, 김명국, 김경옥, 김원홍, 정명도, 이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상려, 최경성, 우동측)으로 권력의 중심이 점차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내에서 아래의 <그림 3>과 같은 새로운 김정은 영도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림 3> 당 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은 영도체계 구조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은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수령-당-국가라는 영도체계

는 만들었지만, 수령-당-인민대중의 통합체계, 즉 김정은에 대한 인민들의 자발적 지지 구조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어리고 경험 없는 후계자에 대한 불만과 심지어 무관심만이 더 늘어났을 뿐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선군리더십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생명체로 엮어 내는 사상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후계자론은 “인민대중의 참된 지도자를 수령의 후계자로 추대한다”⁵⁾라고 언급하고 있다. 후계자는 ‘인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일이다. 이것은 혁명건설의 과정에서 지도와 대중의 관계에서 성립된다. 인민대중은 역사발전의 동력이며, 주체이지만, 수령과 당(후계자)의 올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다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없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어떻게 인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 와식주 문제를 국가가 아닌 개인들의 능력을 통해 해결하게 된 이후부터 수령과 인민대중이 하나의 정치적 생명체라는 집단주의적 가치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선군시대 선군사상에 바탕을 둔 수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엮어줄 새로운 통합체계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2012년 이후 김정일이 그토록 강조했던 ‘강성대국’에서 찾을 수 있다. 김정일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었고 웅대한 목표였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사상, 정치, 군사강국의 기반 하에 경제강국을 건설하여 명실상부한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선군시대 김정은이 수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 낼 방법은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결국 과거에 당이 그 역할을 했다면, 지금 선군시대에는 ‘시장’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수령-인민대중의 통합의 기반은 ‘실리주의’에 두어야 한다. 고도의 억압체제 속에서 실리주의는 수령과 인민대중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 사실 김정일이 강성대국을 외친 것도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2002년 ‘7.1 조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장을 토대로 수령과 인민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물론 7.1조치로 인해 유입된 자본주의적 문화는 북한의 집단주의적 의식을 악화시키는데 큰 원인을 제공했지만, 배급제가 붕괴된 이후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을 지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김정은 후계체제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확대와 자본계층의 등장에 위기를 느낀 북한 당국은 최고인민회의 정령과 내각 결정에 따라 2009년 11월 30일 전격적인 화폐개혁 조치를

5)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 35.

단행하였다. 화폐개혁의 대외적인 명분은 2002년 7월 1일 단행한 ‘7.1 조치’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지만, 김정은으로의 권력을 세습하는데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는 시장 세력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극약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단기적으로 화폐개혁은 김정은 후계체제 위협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과를 거두었으나, 장기적으로 북한주민들의 반발과 충분한 물품의 공급으로 확대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공급 물량의 부족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식량공급 부족으로 인해 함경도 및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아사자가 나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김정일은 화폐개혁 실패를 물어 북한 경제를 총괄했던 박남기 당 재정부장을 공개 총살 시켰다. 결국 화폐개혁은 김정은에 대한 인민대중의 자발적 지지를 무너뜨리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결국 화폐개혁은 주민들에게 더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였고, 그나마 주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던 수령-인민대중의 집단주의적 가치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북한 후계체제의 구조적 의미에서 김정은 유일지도체제의 기반이 당에서 군으로 교체된다는 것은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영도체제와 통합체제로 구성된 북한 수령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령-인민대중의 정치적 생명체를 의미하는 통합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결국 고도의 억압체제만 남게 된다. 이것은 만약 북한이 과거 90년대 중반 있었던 고난의 행군과 같은 혹은 다른 형태의 위기, 즉 엘리트 충돌 등 급변사태와 같은 체제위기를 다시 맞는다면 현재의 억압체제 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김정은 체제가 경제 및 식량 위기가 내재화 된 북한의 현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더 억압적이지만 오히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IV. 후계체제의 정치적 차원 : 수령과 후계자의 권력 갈등

독재자는 후계자를 지명하거나 지명하지 않거나, 모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 위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독재자가 강력한 후계자를 키우면, 그가 권력을 찬탈하거나, 내부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후계자에게 독자적 권력기반 구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후계자를 분명하게 뽑아놓지 않으면, 현존 통치자가 사망한 이후 무절제한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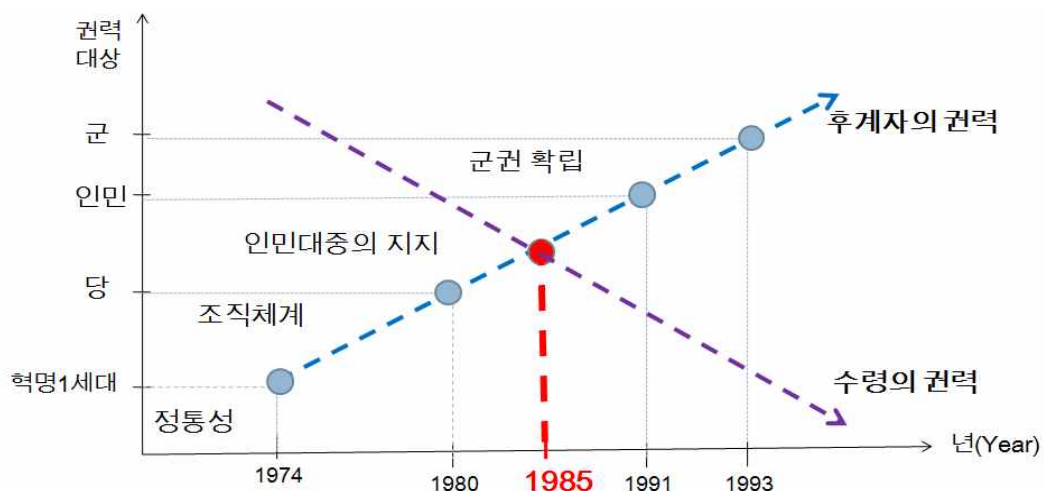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북한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북한의 최고위 탈북자인 (故)황장엽씨는 김일성과

6)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o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59 (July 2007), pp. 595~628.

김정일의 권력 균형이 1985년을 기점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5년 이전까지를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 으로 불렀고, 1985년 이후를 ‘김정일/김일성 공동정권’ 으로 불렀다.⁷⁾ 북한 후계자 문제에서 왜 이런 권력의 역설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수령이 살아 있는 동안 후계자를 선출하는 북한의 후계자 선출 방법 때문이다. 무엇보다 후계자 선출과 관련된 소련(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과 중국(린바오의 쿠데타 시도)의 정치적 혼란은 당시 북한 지도부에게 ‘후계자 문제의 우선적 해결’ 이 북한의 혁명건설의 완성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건임을 알게 해 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후계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령의 권력은 점차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 목표를 혁명 1세대, 당, 인민, 군으로 점차 확장하였다.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가 수령의 영도체계 내에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수령과 후계자의 ‘권력의 역설’ 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북한 후계자 문제의 정치적 의미는 바로 후계자와 수령의 힘의 균형점을 의미한다. 후계자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수령의 권력은 약화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 일뿐 권력의 역설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림 4〉 후계체제의 정치적 의미



북한에서 후계자 등장의 정치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정일 자신이다. 김정일의 건강문제는 김정은 후계체제를 등장시킨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만약 김정일에게 건강 문제만 없었다면 후계자 문제는 상당기간 수면위로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다. 2008년 8

7)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 2001), p. 89.

월 뇌졸중 이후, 김정일은 2009년 1월 공식 무대에 복귀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삼남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왜 세 아들 중 막내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선택했을까? 후계자가 자신의 유일지도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김정일은 후계자 시절 김일성의 보호아래 있었지만, 사실 그의 유일지도체제는 김정일 스스로 쟁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7년 갑산파의 숙청을 주도하고, 1970년 이후 김영주와 김평일과의 후계자 경쟁에서 혁명 1세대들의 도움을 이끌어냄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20대 후반인 김정은은 어떤가? 과연 김정은에게 지도자로서 정치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명된 것일까? 물론 김정은의 개인적 능력을 완전히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후계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권력 약화를 급격히 초래할 수 있는 후계체제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권력누수 없는 조용한 후계체제를 원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의 세 아들 중 이미 당내 권력 기반을 갖추고 있는 장남 김정남과 차남 김정철은 김정일의 후계 구상에는 맞지 않는 후보인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만들어준 권력 테두리 안에서 후계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은 김정일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후계자였다.

그렇다면 김정일과 김정은 사이에서는 이러한 ‘권력의 역설(역전, 갈등)’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크게 두 시기로 나눠서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후계자 준비 제 1시기, 즉 김정일이 뇌졸중에서 회복하고 복귀한 이후 자신의 삼남인 김정은을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한 2009년 1월 8일 이후부터 2010년 9월 제 3차 당 대표자 대회에서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가 된 시기까지이다. 둘째, 후계자 준비 제 2시기, 즉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통해 공식 후계자가 된 이후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시기까지이다.

첫 번째 시기, 왜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하면서 조직지도부를 맡기지 않았는가?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되지 전 이미 1973년 전원회의에서 조직지도부 부장과 비서, 선전선동부 부장과 비서직을 맡았다. 북한 권력체제에서 조직지도부는 권력의 핵이다. 김일성 다음의 후계자로 여겨졌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또한 조직지도부 부장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후계자가 유일지도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조직체제를 만들고 후계자 중심의 엘리트 구조(예를 들어 3대 혁명소조원)와 후계자 중심의 새로운 규율과 원칙(예를 들어 당 유일사상확립 10대 원칙)을 제시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인사권, 보고권, 검열권을 후계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에게 북한 권력의 핵인 조직지도부를 맡기지 않았

다. 오히려 조직지도부 내의 파워 엘리트의 숙청을 추진했다. 2010년 6월 장성택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인 이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제강은 권력의 컨트롤타워인 당 조직지도부에서만 37년을 근무했으며, 2004년 장성택 당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숙청을 주도했다. 또한 김정은 후계자 결정 내용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전달한 인물이다. 이제강의 죽음은 장성택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다툼 전에 발생했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의 결과로 읽혀진다. 이제강 뿐만 아니라 조직지도부에서 군 조직, 인사업무를 1994년 이후 16년 동안 맡아온 이용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도 2010년 4월 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김정일 후계체제의 본산이며, ‘당 속의 당’인 조직지도부 내의 중앙당과 군부를 맡고 있던 제1부부장 두 명의 갑작스럽게 사망은 조직지도부의 권력을 급격하게 추락시켰다. 또한 2010년 9월 제 3차 당 대표자 대회이후 장성택의 최측근인 박정순 또한 이제강의 빈자리인 조직지도부 중앙당 제1 부부장에 임명되었지만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현재 조직지도부 내에 제1 부부장은 김경옥이 유일한다.

결과적으로 조직지도부의 약화는 조직지도부를 대체하는 장성택의 당 행정부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 행정부는 북한 내 공안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법원, 검찰 등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총정치국과 군보위부 또한 직간접적인 영향범위에 들어간다. 김정은의 후계체제가 등장했지만 후계자의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할 조직지도부는 오히려 공백상태가 됨으로써 김정은이 빠른 시간 내에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만들 기회를 놓쳤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조직지도부를 내어 줌으로써 후계자에게로 급속하게 권력집중이 될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김정일의 판단 때문이다.

두 번째 시기, 김정일은 왜 군사 통수권을 행사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후계자의 조직공간으로 선택했나? 김정은은 후계체제 전반기(2009년 1월-2010년 9월)에 자신의 조직체계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2010년 9월 제 3차 당 대표자 대회에서 김정은을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은 당의 군사부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후계자의 조직체계가 아닌 군 통수권을 보장하는 자리이다. 즉, 당 규약에 따라 당 중앙군사위는 무력의 ‘군사지휘권’과 군수사업의 ‘군사지도권’을 모두 국방위원회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은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이 총비서만 승계하면, 자동적으로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조직체제도 확립하지 못한 후계자에게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은 수령과 후계자 사이의 정책 선택을 놓고 권력 갈등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계체제 전반기에 김정은에게 스스로의 조직체계를 수립할 기회를 주지 못한 김정일은 후계자를 공식화 하면서 어린 후계자가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리한 권력 이양을 추진했다. 무엇

보다 김정일이 자신의 건강을 고려할 때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군 통수권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군은 수령의 영도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경우에도 당을 중심으로 후계체제를 형성했으며, 그가 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위를 부여 받은 것은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1991년 최고사령관, 1993년 국방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실질적인 군 통수권을 이양 받을 수 있었다. 즉 김정일의 군 통수권은 후계체제의 마지막 단계인 1990년 이후 이뤄진 것이다.

반면 김정일의 경우에는 아무리 선군에 기반을 둔 후계체제라고 하더라도 군 통수권에 대한 접근이 후계체제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이뤄짐으로써 후계체제의 정치적 의미, 즉 수령과 후계자의 권력 역설, 갈등 현상 등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김정일과 김정일의 권력 갈등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그것은 6자 회담을 둘러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 2010년 5월 이후 김정일은 약 1년 동안 중국을 세 차례 방문했고, 이후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무엇이 김정일로 하여금 이토록 무리수를 들게 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지원이 절실했지만, 장기간에 걸친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였다.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조건 없는’ 6자 회담 재개를 외친 것도 이러한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이러한 노력과는 반대로 북한 군부는 치명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김정일이 2010년 9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통해 후계자로 공식화 된 이후, 2010년 11월 남한의 연평도를 포격하였다. 이로 인해 4명의 군과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남한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6.25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지난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보다 훨씬 더 대범한 도발이었다.

결과적으로 남한과 미국은 6자 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고, 너무나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또한 남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노력은 북한 군부의 군사적 도발로 인해 좌절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북한 내에서 이러한 정책 충돌이 발행할 수 있었는가? 즉, 김정일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던 북한 군부가 어떻게 이처럼 치명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지난 제 3차 당 대표자 대회 이후 개편된 북한 파워 엘리트 체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정책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로 나뉘어 졌다. 첫째, 2012년 강성대국 선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얻기 위해 체제 안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외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공유하

는 세력과 둘째, 2012년 강성대국 선포를 위해 대외적인 군사적 긴장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후계체제의 조기 안착과 선군 정치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공유하는 세력으로 분화되었다. 따라서 당 중앙군사위를 후계자의 조직공간으로 제시한 김정일은 불가피하게 당 중앙군사위 중심의 파워 엘리트 분화를 촉발시켰고, 그로 인해 후계자의 권력을 등에 업으려는 파워 엘리트들의 권력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V. 결론

사실상 지금 후계자 김정일의 권력은 권력의 몸통과 손, 발은 없고 머리만 있는 모습이다. 스스로 권력 엘리트에 대한 인사권을 아직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그리고 후계자 중심의 조직체계 또한 마련하지 못했다. 그리고 후계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엘리트 체계 또한 장성택 중심의 체계 보위 엘리트와 이영호 중심의 신군부 엘리트로 분화되면서, 과거 김정일이 학연과 혈연 그리고 직연을 통해 구축했던 단일엘리트 구조 또한 깨진 상태이다.

김정은 후계체제의 불안정성은 결국 김정일이 과감하게 김정은에게 스스로 조직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김정은에게 더욱더 뼈아픈 것은 북한체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지도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자신의 엘리트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은 국방위 부위원장,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대장 등 북한 권력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권력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총참모장이며, 차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다.

만약 김정일이 2011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조명록 이후 공식인 총정치국장으로 공식 임명했다면, 김정은 후계체제는 사실상 군부를 기반으로 한 지금 보다는 조금은 나은 군부 내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김정은이 사실상 총정치국과 군보위부를 지도하고 있다는 설(設)이 있지만, 이것은 후계자의 공식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정통성이 결여된 것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김정은의 체제의 안정성을 지금 현 상황에서 완전하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만은 명확하다. 혈통승계의 정통성은 조직체제도 구축하지 못한 후계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북한의 파워 엘리트 중 누구라도 엘리트 내 지배적 권력을 만들어 낸다면, 김정은은 더 이상 최고지도자로서 아무런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수령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것은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의 방향과 속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